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7/ 10 통권 168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납부기한연장제도의 활용 및 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의 불이익
- 외화 선수취시 부가세 과세표준
- 원자재 인상 분 소급 적용 일괄 회수 처리시 부가세 문의
-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청년창업 100% 지분자가 다른 청년에 50% 지분 양도해 공동대표 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됨 (p.9)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거주자개인과 별도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이나 조직의 종류와 법적근원〉

개념구분	해당내용, 범위 등(관련 규정 등)
사단, 재단법인	민법 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영리 아닌 사업목적 가진 사단, 재단법인 등(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가목)
사립학교법 설립	사립학교법 특별법상의 법인으로 민법 32조 목적과 같음 : 이익 배당가능법인 제외(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나목)
열거된 공영조합	시행령에 열거된 공영조합 등(법인세법 제2조 제2호 +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단위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연합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단위조합, 산림조합과 중앙회 · 연연초생산협동조합과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연합회, 대한염업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조직으로, 외형상 사단, 재단, 법인형태는 갖추. ①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으나, 법인설립 등기되지 않아 법인격 없는 것 ② 공익목적출연기본재산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③ 기타의 임의단체(동창회, 동호회, 입주자대표회, 종친회 등 : 별도의 법인으로 분류 +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가능)
주택조합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기타조합(위에 열거된 경우 아님) - 이들은 모두 영리조직임
임의단체들	산악회, 계모임, 축구회 등 수익배분조건이 없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신청발급받아, 개인대표자와 별도 구분되는 단체 명의통장 개설(수익행위하면 안되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됨)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83호 / 주간 28호

2024. 7. 10.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거주자 개인과 별도 과세되는 비영리법인과 조직의 종류와 법적 근원	표지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 선수취시 부가세 과세표준 - 공통매입세액안분 계산시 면세사업시작일 기준으로 불공제 대상매입 세액을 산출하여도 되는지요? - 원자재 인상 분 소급 적용 일괄 회수 처리시 부가세 문의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 명세 	2 3
눈에맞는 절세미인	납부기한연장제도의 활용 및 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의 불이익	4
매일절세재무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동경제 로드맵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조세 감면 내용 	6 7
직장인Survival	'문득 생각이 나서' 해보는 용기	8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사전법규법인-804, 2023.12.19) -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 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사전법규법인-639, 2023.12.27) 	9 10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671만명... 모든 사업자에 신고 도움자료 제공	11
마 케 팅 Tax consulting	청년창업 100% 지분자가 다른 청년에 50% 지분 양도해 공동대표 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됨	9
세 무 정 보	-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12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8

외화 선수취시 부가세 과세표준

- Q** 부가세 과세표준 관련한 질의 드립니다.
- 2022년 물품대금을 선수취 하고 선수금 처리하였습니다.(환율 1284.10)
- 2023년 물품 선적시 매출로 처리하였습니다.(환율 1,284.10)
- 부가세 신고시 선적일 환율로 수정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1항 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1,284.10원 기준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걸까요?
- A**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외화로 지급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의 의견이 타당한데, 홈택스상에서의 신고문제는 홈택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면세사업시작일기준으로 불공제 대상매입세액을 산출하여도 되는지요?

- Q** 1. 당사는 과세사업만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도중에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월부터)
2.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산출시 9월까지의 면세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실지귀속 명확하여,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요.
3.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이니, 면세사업과 관련없더라도 7월부터 불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A** 불공제대상 매입세액 산출시 공제/불공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안분계산을 하는 것이므로, 10월이전 매입분은 안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자재 인상 분 소급 적용 일괄 회수 처리시 부가세 문의

Q 최근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 당사 해외 판매처에 판매단가를 현실화 하여 보상키로 협의를 하고 과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단가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PO(2022.08월)를 받았고 이에 대한 인보이스도(2022.08월)에 발행이 되어 2022.10월초에 수금 이 될 것이라는 확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당사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런지 여부입니다.

A 수출금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증감사유가 확정되어 인보이스가 발급된 시점이 속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귀사의 의견대로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 명세

Q 저희가 급여시 일괄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지정기부금으로 반영하고 있는 내역에 대하여 연말정산 교육이나 여태까지는 우리 연구원 이름으로 기부금 내역을 전송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노동조합비는 노조위원장 주민번호로 전송하고, 각출되어 연말이나 명절에 복지단체로 기부하는 금액은 그 해당하는 단체 사업자번호로 신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노동조합비는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급여에서 각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개인과 실제로 기부하는 단체와는 관련성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예전부터 재난성금이나 불우이웃돕기 등 연구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은 해당단체가 아닌 연구원 명의로 신고를 해왔는데 갑자기 해당단체에게 개개인별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것도 어렵 습니다.

A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요구대로 처리하고 귀사의 질의에 포함된 유권 해석대로 각 직원들은 별도의 기부금영수증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되며, 추후 세무당국에서 기 부금내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해당 내용대로 소명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부기한연장제도의 활용 및 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의 불이익

상담실 백종훈 차장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산, 협력업체의 납품 중단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자금 상황이 경색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자금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과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납부기한내에 미납부시 각종 불이익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에 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재산의 압류나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① 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미납세액×미납기간(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22/100,000의 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를 합산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②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되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사업의 정지·허가의 취소도 할 수 있으며, 출국규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행정규제도 뒤따른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요건 및 승인절차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연장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 자진신고납부세금의 경우「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물론 누구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납부기한 연장사유 ◆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종인 경우
-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등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⑧ 위의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결정되는데, 연장 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고지서를 받은 세금의 경우에도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역동경제 로드맵 주요내용

법인세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등) 증가금액 5%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개인주주 대상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14 → 9%, 최대 45 → 25%)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확대 대상(중견 매출액 기준 폐지)·한도(600 → 1200억원) 확대

화

OECD 국가들의 상속세 과세 방식

유산취득세형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유산세형	덴마크, 한국, 영국, 미국
개인소득세 하에 증여세	라트비아(상속세 없음), 리투아니아(상속세와 분리)
상속세 폐지	호주(1979), 오스트리아(2008), 캐나다(1972), 체코(2014), 이스라엘(1980), 멕시코(1961), 뉴질랜드(1992), 노르웨이(2014), 슬로바키아(2004), 스웨덴(2004)

* OECD



일자리 창출 조세 감면 내용

단계	주요 내용
신규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 29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 ~ 1천2백만원(최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 (조특법 § 30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 75%, 그 외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70%(청년 5년간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 29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최대 3년)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전환인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복귀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가능(중복불가)
재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 29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복귀자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 29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1년간 인건비 30%(중견 15%)
고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조특법 § 30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임금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 29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 세액공제



'문득 생각이나서' 해보는 용기

직감을 기르는 방법은 생각난 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보는 것이다. 생각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생각'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가 '문득' 생각나도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주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모처럼 떠오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

문득 생각이 나서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을 가본다,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본다... 이처럼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패턴을 깨뜨리고 직감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28일 (금)	7월 1일 (월)	7월 2일 (화)	7월 3일 (수)	7월 4일 (목)
미	달	러	(USD)	1389.20	1382.40	1380.80	1387.40	1389.40
일	본	엔	(JPY)	864.31	859.57	855.38	859.42	859.59
영	국	파	운 드	(GBP)	1755.95	1748.60	1746.09	1760.54
캐	나	다	달 러	(CAD)	1013.76	1011.04	1005.02	1014.66
홍	콩	달	러	(HKD)	177.90	177.03	176.74	177.57
중	국	원	(CNH)	190.43	189.35	189.16	190.09	190.13
유	로	화	(EUR)	1487.07	1484.35	1482.56	1491.11	1499.02
호	주	달	러	(AUD)	923.40	923.10	918.72	925.26
싱	가	폴	달 러	(SGD)	1022.75	1020.07	1016.83	1023.2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4.35	293.04	292.98	294.00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청년창업 100% 지분자가 다른 청년에 50% 지분 양도해 공동대표 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됨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사전법규법인-804, 2023.12.19

■ 질 의

- 질의법인은 청년 '갑'을 100% 지분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갑을 단독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설립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질의

- 내국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3396, 2023.10.18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하는 시행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 질의법인은 법인규칙 26①(2)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 '22.5월에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을 건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이 되고 상가는 미분양됨
- 미분양 상가는 본래 분양 목적이었으나 공실로 보유 시 금융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할 예정임*
- * 질의법인은 임대 중에도 상가의 분양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임

질의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 상가를 5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 회 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하는 것임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사전법규법인-639, 2023.12.27

■ 질 의

-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인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수입보증료」인지 여부

[감설] 기업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수입보증료

[을설]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수입보증료

■ 회 신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23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17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기준법무법인-146, 2023.12.14

■ 질 의

- A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다만,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 이후 2017.11월경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함

* 농어업경영체법 § 4 농어업 · 농어촌에 관련된 용자 ·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질의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적용 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요건인지 여부
(1안) 감면적용 시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안) 감면적용 시 필수요건에 해당함

■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671만명… 모든 사업자에 신고 도움자료 제공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통 도움자료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이 담겨 있으며,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에서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급비서 대상자 15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약 2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년 동기대비 21만명 증가한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늘어난 128만개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무주택자 세금혜택 확대… 동종업종 재취직 요건 폐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9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재취직을 위한 공백기간을 빼고 3년을 채워서 받는다.

경력단절여성의 동종업종 재취직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남성도 2~15년 이내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우 업종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료 예정인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

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공제요건을 공제납입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올해 1년에 한해 실업자·비정규직 생계비 대부 한도를 대폭 확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다.

무주택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가 지 확대한다.

24년째 높은 상속세율…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해야"

현행 상속세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4년째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 과세표준 구간을 고정하고 있어 상속세를 인하고 공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민의힘 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 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과중해 인한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 개선방으로 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과세하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대부분(19개국)은 유산취득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산세형은 실제 상속분이 많은 적든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2024. 6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하반기에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7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1. 금융·재정·세제

- ☐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및 개장시간 연장**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24.7.1.)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

**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24년 하반기)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 예정(하반기 내 최대 5조원 기금 지원)

** 8월까지 사업자 선정(1차),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24.7.1이후)

*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

2. 교육·보육·가족

-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❶과 이자면제 범위❷ 확대('24.7.1.)

❶ (등록금 대출)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 1~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

❷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학자금지원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상환유예)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 되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 가능('24.9.27.)

*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 스톱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 지원('24.7월)

* 피해자의 일상생활 지속을 위해 개별 거주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최대 30일)

** ('23년) 6개 시·도 → ('24년) 전국 17개 시·도



3. 보건·복지·고용

- 주돌봄자 부재, 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24.6월, 지자체별 상이)
 - * (지원내용)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지역) 14개 시·도(122개 시·군·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24.7.1.)
 - *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 * 가 기존('23년) 3개소(서울, 부산,대전)에서 14개소를 신설하여 총 17개소로 확대(12월까지 순차 추진)
 - * 지역 내 중독자 발굴, 사회복귀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회복지원가 양성, 재활교육 등

4. 문화·체육·관광

- 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처음 시행되어, 미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24.7.26.)
 - * ('24년 시행) 지원 근거 마련(작가 권익보장 및 소비자 보호), 공공미술 은행 도입
('26년 시행) 미술 서비스업 도입 및 공정한 시장거래 의무 부과
('27년 시행)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창작자 권리보장) 도입
-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여 여권발급 비용 인하*('24.7.1.)
 - *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는 면제
-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24.7.1.)
 - * 면제 기준연령 : (당초)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 면제 / (개편) 12세 미만 면제

5. 환경·기상

-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24.7.1.)
 - *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

-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mu\text{g}/\text{m}^3$ 초과)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24.11월)
 - * (기존)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예보권역)
(확대)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
-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24.12월)
 - * (7개노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기존), +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추가
 - ** (3개 내비게이션) 티맵, 카카오내비(기존) + 아틀란 / (관측망) 55개소(기존) → 259개소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전기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하여 총 1.0%p 인하('24.7.1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 * (1차) '24.7월, 0.5%p 인하(3.7%→3.2%), (2차) '25.7월, 0.5%p 추가 인하(3.2%→2.7%)
-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24.7.10.)
 - * ①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②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확대)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인정
 - ③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허용)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24.8.21.)
 -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개별 기업에 유예 1회만 적용,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

7. 국토·교통

- 1기 신도시(5곳①)를 대상으로 선도지구②공모 시행(6월),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③(공모 6월, 선정 11월)
 - ①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 ②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
 - ③ 추진일정 : 공모 지침 확정·공고(6.25) →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9월) → 평가 및 국토부 협의(10월) → 지자체가 선도지구 최종 선정(11월)
-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24.7.17.)
- *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24년 하반기)

8. 농림·수산·식품

-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최초7+연장9)으로 확대('24.7.3.)
- * (기존)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사용 가능
(개선) 16년(7+3+3+3), 「농지법시행령」시행('24.7.3)
-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최소화('24.10월 예정)
- *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일괄 살처분 실시
-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수산물 품목선정*, 거래규격을 마련하여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개시('24.7.1.)
- * ('24~'25) 냉동·건어물 중심 → ('26) 선어류까지 확대

9. 국방·병무

-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24.7.10.)
- * 기존에는 병역·입영 판정검사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는 경우 선별 검사 실시

-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 출시('24.7월 중)

*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 기준

** (혜택)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금융사)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 입영 전,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24.7월)

* ① 지원센터 : (기존)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확대) 11개 지역(기존 + 울산, 창원, 의정부센터)

② 프로그램 : 1:1병역진로상담, 입영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교육

10. 행정·안전·질서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 에서 무료 발급('24.9.30.)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24.12.27.)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으신 분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

-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24.7.3.)

* ① (긴급조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② (피난명령)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③ (거짓신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발췌)

◎ 기획재정부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 ❖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RFI*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

- ❖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국내 자본시장·금융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추진배경 : :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국내 외환시장을 외국인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구조로 전환 추진
- 주요내용 :
 -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공급망안정화법」(2024. 6. 27.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국수출입은행 운용)하고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합니다.

- ❖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¹⁾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²⁾ 및 경제안보서비스³⁾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 1)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 2)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물자·원재료(부처 지정)
 - 3)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서비스·기반 시설(부처 지정)
- ❖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선정(1차)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 마련 등 본격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2024년 하반기 내 최대 5조원 기금 지원).

기금은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최종 기금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

■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요

- 추진배경 : 경제안보 공급망안정화 사업을 지원하여, 공급망 위기를 대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 등이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기금의 출범 및 자금지원 개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2024년 6월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 학습자·교육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출범합니다.

-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아 학습자에게 원스톱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학습자의 연령과 관심사 등에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검색·로그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 ❖ 학교 교사·지역경제센터 강사 등 교육자가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현행 경제교육포털인 경제배움e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https://econedu.go.kr>)'으로 통합될 계획입니다.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 추진배경 : 다양한 경제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한 신규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
 - 정부 · 공공 ·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 연계
 -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최신 학습자료 제공
 - 개인 연령 ·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기능 강화
 - 경제교육 교사, 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에 대한 교수 학습자료 공유 및 소통채널 제공
- 시행일 : 2024년 6월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2024년 7월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주체) 관세청

❖ (제공 대상) 본인 또는 제3자*

* ①관세사 · 관세법인 · 통관취급법인 등, ②세무사 · 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 · 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 추진배경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
- 주요내용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을 허용합니다.

- ❖ 독촉장은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통지서 전자송달과 같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납세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11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하여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 공매재산에 대한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며,
- ❖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 추진배경 :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 주요내용 :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와 동일하게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하여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협·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 * 경제안보품목: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 제4호)
- ❖ 구체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



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확대될 품목 중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 ❖ 또한, 2024년 하반기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운영하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리 우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 추진배경 :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예정(6. 27.)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개편
- 주요내용 :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온 경제안보품목 개수 확대 및 안정화 지원 강화
- 시행일 :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024. 6. 27.) 이후 개최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 13

◎ 문화체육관광부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2024년 7월부터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의 개편 시행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로 확대됩니다(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
- ❖ 또한,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 추진배경 :
 -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 요구
 - 이에 따라, 2024년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출국납부금 부담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발표
- 주요내용 :
 - (면제대상 확대)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

- (부과금액 인하) 항공기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구분	당초	개편
면제 기준연령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 면제	12세 미만 면제
부과금액	공항 1만원, 항만 1,000원	공항 7,000원, 항만 1,000원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인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합니다.

-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합니다.
- ❖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추진배경 :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
- 주요내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30%에서 20%로 인하
 - * 부담금 부과율: <기존>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30%, (밖) 개별공시지가 30% <개선> 농업진흥지역 (안) 개별공시지가 30%, (밖) 개별공시지가 20%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시행일 :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양생태



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부담금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3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 추진배경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5월 31일

◎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조특법」 제106조의9 ①항).

* (종전)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 → (확대) 비철금속류 스크랩

❖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 기존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는 기존 계좌 계속 사용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 품목 확대

- 제도개요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 추진배경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품목을 비철금속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확대
 -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이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 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2배 상향(200만원 → 400만원)합니다.

- ❖ 전자상거래물품 수출 시 일반수출신고에 비해서 신고 항목 등이 간소(57개 → 27개)한 간이수출 신고가 가능하여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간이수출신고는 정식 수출신고이므로 신고 항목이 간소화됨에도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은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

- ❖ 2024년 하반기부터 400만원(FOB기준)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에 대해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개정·적용

- 추진배경 :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완화



- 주요내용 : 그간 물가·소득수준 상승 등 경제수준 향상을 고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예정)

◎ 조달청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그간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 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시행합니다.

❖ 조달청은 조달계약을 도급**과 매매로 구분하기 어려워 2011년 1월부터 전자문서로 체결된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 정부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등법 시행령」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 부과

** (도급의 정의)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하지만, 「인지세법」 및 「민법」에 따르면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으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축소되어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연간 약 16,000건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경감됩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지침

- 추진배경 : 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는 「인지세법령」과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조달청은 행정 편의상 일괄부과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지세 부과기준 마련 추진
- 주요내용 : (현행) 1,000만원 이상 일괄 부과 → (개선) 계약의 실질에 따라 공급계약과 단가계약 인지세 비부과
- 시행일 : 2024년 7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2024년 하반기부터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등에 기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할 경우 비축물자 방출한도 확대 및 외상·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 현재 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으로 선정하여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 배정, 방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 ❖ 「공급망안정화법」(2024. 6. 27.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도 공공비축사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 추진배경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약칭 :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공공비축사업 참여 시 지원
 -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공공비축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 「조달청 비축업무 운영규정」 개정(2024. 5.)을 통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받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배정, 방출한도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상환기간 연장 시 가산이자 면제 등 지원
- 시행일 : 2024년 7월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의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합니다.

- ❖ 유튜브(YouTube) 전용 채널을 통해 입찰참가자 발표 및 질의,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심사 운영의 공정성과 심사위원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2024년 6월 이후 심사 건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 대형 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 추진배경 : 건설사업 심사제도의 특성상,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커 부정한 청탁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책임감·신뢰도 높은 심사 유도 필요
- 주요내용 : 유튜브 전용 채널을 통해 입찰참가자 발표 및 질의,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 전(全) 과정을 실시간으로 송출
- 시행일 : 2024년 6월(이후 심사 건부터)

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국민·현장 공무원이 제안한 공공수요(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 ❖ 공공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공모를 추진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합니다.
 - ※ (기존) 연 4회 공모, 특허요건 필수 → (개선) 상시 공모, 시급성·시장 상황에 따라 특허요건 완화
- ❖ 수요자제안형으로 발굴된 혁신제품은 필요한 기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신속 시범구매를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 추진배경 : 국민이 제안한 공공수요를 해결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및 국민 체감도가 높아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
 -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상시공모 및 신청요건 완화
 -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별도의 수요 매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기관에 시범구매 지원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2024년부터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도입됩니다.

- ❖ 기존에는 외산·대기업·중견기업의 상용SW도 중소기업 상용SW와 동일하게 제3자단가계약(수의)을 체결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 앞으로는 외산·대기업·중견기업 SW와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상용SW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경쟁합니다.
- ❖ 중소기업은 이전과 같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중소기업 SW기업 보호 및 SW산업 기술성 경쟁 강화
- 주요내용 : (계약대상) 외산·대기업·중견·중소공급 SW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SW는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중 선택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지식재산공제에 소액납입제를 도입하고, 지식재산비용대출 요건을 확대합니다.

※ (지식재산공제) 국내·외 지식재산분쟁 및 출원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지식재산



비용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

- ❖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을 위해 소액납입제를 도입하여 월 10~20만원의 소액 부금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에는 부금월액(30~1,000만원)·부금총액(1,500만원~5억원)으로 운영

- ❖ 지식재산비용대출 요건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관련 특허청 사업 등의 기업부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약관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 (소액납입제) 적립형 공제의 최저 부금월액을 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 (§ 8③)
 - (대출 사유 확대) 약관상 지식재산비용대출 기타 인정범위를 구체화하여 특허청 사업 등의 기업부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예정)

◎ 금융위원회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2024년 7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합니다.
 - *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법 시행 후 6개월 전(2025. 1. 2.)까지]부터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
- ②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 ③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감독·감시해야 하는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 ❖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CEO와 임원 등의 책임성이 제

고되어 금융사고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3. 7. 18. 제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고,
 -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최대 무기징역),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추진배경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 주요내용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규정
-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년 10월 17일부터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 금융채무를 연체할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 부

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됩니다.

- ❖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채무자 보호 규율을 강화하여 채권자-채무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달성 필요
- 주요내용 :
 - (사적 채무조정)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
 - (추심관행 개선) 추심 횟수(7일간 최대 7회) 제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 시 추심 유예 등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 방지
- 시행일 : 2024년 10월 17일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이 개정됩니다.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요건(잔액 100억원 또는 대출 비중 70% 이상)을 충족하는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

- ❖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등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합니다.
- ❖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을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은 2024년 6월 12일 개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고시 6개월 후 시행).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 추진배경 :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 부여
 -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을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
- 시행일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일(2024년 6월)부터 시행 (단,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 추가 등은 고시 6개월 후 시행 예정)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이용자에게 맞는 서민금융 상품을 맞춤 안내하여 서민금융 이용의 편리함을 확보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합니다.

- ❖ (편의성 확대) 이용자에게 맞는 민간과 정책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대출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개편하고
- ❖ (정확성 제고) 연계 가능한 민간상품을 확대하고, 정책상품의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며
- ❖ (접근성 강화)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함께 제공하고,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 추진배경 :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 노력과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운영체계 마련
- 주요내용 :
 -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신설
 -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강화
- 시행일 : 2024년 6월 30일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7월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2024. 1. 23.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¹⁾·주요주주²⁾)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³⁾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 1) 이사·감사및사실상임원업무집행책임자등
 - 2)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3)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약증권 등 포함
- － 매매예정일 30일(잠정)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및거래기간등을공시하여야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완료시확정

** ○ 시행일 : 이후 30일(잠정)간(2024. 7. 24.~8. 22.)은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 가능하다는 점을 계도할 예정

동 제도를 통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되어,

❖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 추진배경 :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 주요내용 :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일정규모 이상 지분거래 시 30일(잠정) 전에 거래계획 보고서를 제출 (금감원·거래소)하도록 의무 부과
-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2024년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되며,

*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상 교부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 예)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 ❖ 그 밖에 진입-영업-퇴출 전 범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율체계가 강화됩니다.
 - (진입) 금융관련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위반(벌금형 이상)한 경우에도 진입이 제한됩니다.
 - (영업) 소비자에게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 정식 금융 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표현 등이 금지됩니다.
 - (퇴출) 직권말소 사유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최근 5년내 2회 이상 과태료 부과)·「소비자보호법령」(벌금형 이상)을 위반한 경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통해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및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그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

** 상대방 계정, ID,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가 제공하고 있음

- ❖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문자)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 또한, 간편송금 방식을 통한 피해금 이전으로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간편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 →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 발생

■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 추진배경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
- 주요내용 :
 - (통장협박) 통장협박 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닌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 허용



- (간편송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가능
- 시행일 : 2024년 8월 28일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2024년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으나,
 - 2024년 9월부터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 고금리 시기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 촉진이라는 시장원리를 통해 국민의 대출 이자부담 절감
- 주요내용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까지 확대
- 시행일 : 2024년 9월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하여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합니다.

- ❖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이 설비·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자금 위주) 수요가 있는 경우
- ❖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 $\Delta 0.8 \sim \Delta 1.0\%p$, 중소·중견 $\Delta 1.2 \sim \Delta 1.5\%p$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제공합니다.

또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을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합니다(7월부터 지분투자 집행).

■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추진배경 :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 주요내용 :
 - (17조원 규모 저리대출 신설) 산업은행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17조원 저리대출 지원  대규모 시설자금 신규투자에 대해 시중 최저수준 금리 제공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로 확대)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원 과 함께 신규펀드 8,000억원을 추가 조성(총 1.1조원)
- 시행일 : 2024년 7월부터 즉시 시행 / 생태계펀드도 7월부터 지분투자 집행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지난 4월 3일 발표했던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시행됩니다.

- ❖ 기술금융 개선방안은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기술금융 개선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 ❖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 및 평가서 세부평가 의견 작성이 의무화되고,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우대금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 추진배경 : 4월 3일 발표했던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주요내용 :
 -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 기술금융 사후평가(품질심사평가) 평가기준 강화



-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 시행일 : 2024년 7월부터 즉시 시행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금지와 제재조치를 규율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시행되었고,

- ❖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해서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2024. 3. 26.)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습니다.

- ❖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한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 ❖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 신고자뿐만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추진배경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
- 주요내용 : 정부지원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는 형사처벌,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은 구조금 신청
- 시행일 : 2024년 9월 27일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앞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됩니다.

- ❖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규정된법률상벌칙또는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행위
- ❖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다만, 금번 변경 사항은 법률 시행일인 2024년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 추진배경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의 경제적 편익 지원 강화 등
- 주요내용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액 폐지 및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 지급
- 시행일 : 2024년 8월 7일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득 보전 강화
- 주요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금 지원
-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
- ❖ (지원수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 추진배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제도 활용 여건 조성
- 주요내용 :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기간,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예정)

◎ 환경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폐기물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 2024년 7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변경됩니다.
-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기준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도입·시행

영세·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항목, 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를 도입·시행합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개요 : 기업의 보안수준 향상,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는 제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인증 의무대상 :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의 자,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등

- ❖ 2024년 7월 24일부터 간편인증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간소화된 인증항목, 비용으로 완화된 부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③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
- ** 인증항목: 기존 80개→40개 또는 44개 / 인증수수료: 800~1,400만원→400~700만원

■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 도입·시행

- 추진배경: 정보보호관리체계를 법제·의무화하여 운영 중이나, 많은 인증항목, 비용 등이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 주요내용: 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경량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 시행
 - 적용대상: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기업, ③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
 - 인증기준: 기존 80개→40개 또는 44개
 - 인증수수료: 800~1,400만원→400~700만원
-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 산업통상자원부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우리 기업이 언제든지, 더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활력법」이 시행됩니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023. 12. 20 개정, 2024. 7. 17 시행).

- ❖ 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하여,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 등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 ※ (기존) 5개 유형(공급과잉 해소·산업위기 지역 대응·신산업 진출·디지털 전환·탄소중립) → (개선) 6개 유형(기존+공급망 안정)
- ❖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기업활력법」상 모든 사업재편에 확대 적용합니다.

- ※ (상법)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계열사 지분을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 ❖ 권역별로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oneshot.or.kr)에서, 신청 방법과 주요 지원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재편 지원제도 보강

- 추진배경 : AI 부상,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와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
- 주요내용 : 「기업활력법」 적용기한·대상·특례범위·지원체계 대폭 보강
 - (적용기한) 한시법(前: 2024. 8. 일몰)에서 상시법으로 전환
 - (적용대상) 사업재편 지원 유형을 기존 5개에서 6개로 확대
 - * (기존)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 (변경) 기존+공급망 안정
 - (특례범위)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되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
 - * (상법)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시 절차 간소화(주주총회 의결 →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법)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최대 5년)
 - (지원체계)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 보강
 - 대·중견기업이 협력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 시, 동반성장 평가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등 참여)를 구축하여 수요 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을 밀착 제공
- 시행일 : 2024년 7월 17일(개정 「기업활력법」 시행)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됩니다.

-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연결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자산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경우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 추진배경 :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
- 주요내용 :
 -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확대)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 제한의 예외로 인정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허용)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유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 2024년 7월 10일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됩니다.

- ❖ 매출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 개별 기업에 유예가 1회만 적용이 가능하여,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적습니다.
 - 다만,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

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됩니다.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유예 불가한 경우를 既규정: ①기존 유예기업(유예 적용은 1회로 한정), ②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할 시, ③대·중견기업과 합병 시 등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 추진배경: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기존 3년)'이 종료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사례가 다수발생하고 중견·중소기업 대다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길 희망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 주요내용: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 → 5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벤처·스타트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현지 사업화 R&D 지원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해외진출 전용 R&D” 트랙을 신설합니다.

- ❖ 현지 사업화 기반의 수출역량 축진을 위해 1단계 시장 조사·분석, 2단계 기술개발, 3단계 현지 사업화 실증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 4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50억원이고,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 신설

- 추진배경: 글로벌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현지화 축진을 위해 해외 시장별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주요내용:
 - (시장조사·분석) 글로벌 시장경쟁력 분석 및 전략 도출을 통해 해외시장 현지화 또는 다변화 성공 가능성 제고
 - (R&D) 시장조사·분석 결과 활용하여 목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지원
 - (현지 사업화 실증) 실제 해외진출국에서 개발기술(제품) 검증 및 적용 효과 확인을 위한 실증 지원
- 시행일: 2024년 7월 초(사업공고 예정)



표준분류(산업) 개정 고시 및 시행

(산업분류) 2017년 10차 개정 이후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등을 반영·개정한 11차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7월 1일에 시행한다(고시일 2024. 1. 1.).

❖ 이번 개정의 특징은 미래·성장 산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산업** 분류항목 통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 수소, 체외진단시약, 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등 산업

** 콩나물 재배, 타이어 재생, 사진 및 영상기, 전자악기 제조, 복사업 등 산업

■ 표준분류 작성 관련 규정

- 개정 근거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 고시
- 주요내용 :
 -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타 법령에서 표준분류를 인용하는 등 제도·정책 목적으로 활용됨
- 고시·시행 : 3대 표준분류는 5년마다 개정하며, 산업과 직업분야는 4, 9자년, 질병사인은 0, 5자년에 개정 고시하고 6개월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함(훈령)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2024년 7월부터 법무부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에 국제 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다만, 기존에는 해외진출·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위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 이에 법무부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을 때 정부 지원이 급

감하는 지원절벽을 완화하고자, 기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법률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수출 증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원절벽 완화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 필요
- 주요내용 :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 관련 무료 법률자문을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선진화

8월 7일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 ①PEF 설립, ②회사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1/3 미만 점입, ③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④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기업 등의 불필요한 신고의무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유형에만 심사역량이 집중되어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8월 7일부터는 기업들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게 되므로,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입니다.



※ 단, 최종적인 시정조치는 제출된 방안의 내용을 고려(필요시 수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부과합니다.

■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선진화

- 추진배경 :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주요내용
 -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에 대한 기업결합은 신고의무 면제
 -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 해당 방안 또는 이를 수정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 부과
- 시행일 : 2024년 8월 7일